



[뉴스]
테라 돌풍
출시 100일 만에
1인당 2.4병 마셔
02



에칭가스 후성·솔브레인 플루오린 코오롱인더 리지스트 동진쎄미켐

위기를 기회로... 핵심소재 국산화 늦지 않았다

日, 반도체 소재 3개 수출 규제로
국내 대체 소재기업 관심 높아져

당장 국산소재로 대체 어렵지만
핵심소재 국산화면 新시장 기회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산
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
체할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주목
받고 있다. 당장 국산 소재로 일본산을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핵
심소재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소재업체들에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
르면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무역 제재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 소
재 기업과 거래를 늘릴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후성, SKC코오롱PI, 동
진쎄미켐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규제 소재 관련기업〉

	애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용도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액 재료
대일 수출 의존도	43.90%	93.70%	91.90%
국내기업	후성,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SK마트리얼즈, 원익마트리얼즈 등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코오롱PI	동진쎄미켐
일본기업	스텔라화학, 모리타화학, 쇼와덴코 등	JSR, 스미토모, 우베 등	혼슈화학공업, 도쿄오카공업 등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일
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소재는 리지스트와 애칭가스, 그
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총 3개 품목
이다.

이 가운데 애칭가스 관련 소재 기업들
로는 후성과 솔브레인 등이 주목받고 있
다. 후성은 반도체 특수ガ스를 제조·판매

하는 기업이다. 후성은 특히 불소화합물
사업에서 30여년간 축적된 불소기술의
노하우와 고도화된 공정기술로 국내에
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현재 삼성전
자, 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용 화학 재료 솔브레인도 최근
공주공장의 반도체용 불화수소산 생산
가능량(CAPA)을 증설한 바 있다. 이밖

에 이엔에프테크놀로지의 자회사 팹테
크놀로지, SK마트리얼즈, 원익마트리
얼즈 등도 애칭가스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애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
순도 불화수소다. 반도체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 등 공정에 사
용된다. 애칭가스의 경우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아 국산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애칭가스의 일본 시장의 세
계시장 점유율은 약 70%다. 스텔라화
학, 모리타화학, 쇼와덴코 등이 관련 기
업이다. 한국의 애칭가스 수입 중 약
2843만 달러인 43.9%가 일본에서 들어
온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업 중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코오롱PI 등
이 일본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두
기업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비슷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투명 폴리
이미드 제품을 개발해 양산설비가 구축
돼 있는 등 필름 관련 소재로는 국내 업
체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을 받
는다. SKC코오롱PI도 고강도 플라스틱
인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필
름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된다.

〈2면에 계속〉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심폐치료 현장 살펴보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활센터 내 심폐치료실을 방문,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심폐치료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심폐치료’는 흉부와 복부 수술 환자와 심장 재활치료 환자 등이 트레이드밀 운동을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돋는 치료 방법이다. (관련기사 L2면)

MRI·CT 이상소견 없어도 의사 진단 땐 ‘치매보험금’

금감원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
신경과 등 전문의 진단서에 제한

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는 MR
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치매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요건
으로 요구한 특정 질병코드, 약제투약
조건 등도 없앤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치매학회의
료자문과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
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 조
건도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
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치매보험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진단
비나 간병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보험사들은 임
상치매등급(CDR)을 1점만 받아도
1000만~3000만원의 경증치매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했다.

실제로 2017년 31만5000건이던 치매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60만1000건
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1~3월
에만 87만7000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치매 진단은 전문의가 진단한 CDR
점수를 기초로 하며 CDR 1~2점은 경
증치매, 3~5점은 중증치매에 해당한

다. 그간 보험사들은 주로 중증치매에
대해 상품을 판매했으나 경증치매로 완
화·확대하면서 ‘제2의 즉시연금’ 사태
가 우려됐다.

이번에도 약관이 문제가 됐다. 현행
경증치매보험 약관에는 치매의 진단 기
준에 대해 ‘CT, MRI, 뇌파검사, 뇌척
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초로 해야 한다’는 문
구를 보험사들은 치매 진단 시 뇌영상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필수로 확인
돼야 한다’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 경증
치매는 중증치매와 달리 뇌영상검사에
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MRI·CT 등 뇌
영상검사가 없어도 보험사는 경증 치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치매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의 진단서에 의하도록 제한했
다. 또 기존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
력청취, 인지기능, 정신상태 평가, 일상
생활능력평가, 뇌영상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치
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아야 보험금
을 지급하도록 한 일부 보험사의 치매
보험 약관도 개선된다. (4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취약계층 빚, 3년 성실상환 땐 최대 95% 감면

금융위,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
주담대연체자 상환기간 3년 유예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 채무자는 채무액이 최
대 95% 감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자도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
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채무조정 프
로그램을 다양화해 채무조정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높
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
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 변제
회금율은 10년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
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환능력이 저하
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
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인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
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규모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
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과중도와 상관없
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 70~90%와 미
상각채권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
다. 이후 남아있는 원금이 1500만원 이
하라면 3년간 50% 성실 상환시 남은 빚
을 모두 없애준다.

예컨대 700만원의 채무(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가 있는
고령자가 특별감면제도를 신청하면 면
제 상각채권 80%(240만원) 미상각채권
30%(120만원)를 일괄 감면 받는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